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 관한 담화 분석 : 개혁·개방 가능성과 방식을 중심으로

김성철(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1. 서론

남북한 관계의 발전 과정에는 걸림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00년 6월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변화는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 국제정치적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냉전 종식의 구조적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또한 남북한 지도자의 이해 관계 또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관계에서는 환경적 또는 구조적 변화와 함께 지도자의 인식과 정책 목표가 중요한 변수이다.

환경적 또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지도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 필요성은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북한의 미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 분석

과 미시적 분석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만일 지도자의 인식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북한의 정책 실패의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지도자의 인식으로부터 행위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여과되어 최초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인간이 주변의 요소를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경적 및 구조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될 수 있다. 행위 주체의 행동을 합리성에 의해서 설명하든, 심리적·인지적 또는 문화적으로 설명하든 간에, 그것 없이는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김정일의 담화 분석을 통해 그의 경제 체제 및 경제 관리 방식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특히 그의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방식에 관한 사고를 추출해 내는 데 있다. 김정일의 경제 인식이 개혁에는 부정적이고 개방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개혁과 개방의 일반적 기준을 기초로 하여 가능성의 잠재 여부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혁과 개방 사이에 존재하는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이 동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김정일의 인식에 관한 분석에 국한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북한 경제 체제와 개혁·개방에 관해서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에 기초한 분석이 별로 없었다. 또한 기존의 많은 북한 개혁·개방 연구들은 환경적 또는 구조적 한계 상황을 지도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추정함으로써, 흔히 거시적인 요인이 지도부의 인식을 결정한다는 인과론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 김정일의 담화 분석을 통한 경제 인식의 이해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김정일의 담화에 대한 기존 분석에서는 주로 이데올로

기, 노동당 등 정치 문제에 치우쳤던 반면 경제 관련 성향과 인식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였다. 이것은 북한 연구의 이분법적 경향에서 비롯되는데, 정치학자들은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경제학자들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 측면들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학제적 연구 및 거시·미시 연계를 통한 북한 사회주의의 체계적 이해를 저해해 왔다. 이 논문은 바로 ‘행방불명된’ 변수인 김정일의 경제 인식을 분석하는 데 소기의 목적이 있다.

김정일의 경제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본 논문은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인식이 개혁·개방의 일반적 요건과 내용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상황 논리보다는 김정일의 인식을 통해 본 효과성에 연구의 의미를 두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사회주의 개혁·개방에 관한 일반적 조건과 내용을 따지며, ②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의 경제 이론을 통해 본 개혁 잠재성을 부문별로 타진하고, ③ 개방 가능성과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서 개혁과 개방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함축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사회주의 개혁·개방 : 조건과 내용

사회주의에서 개혁·개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서 최소한의 개혁·개방의 논리를 찾아볼 수는 없을까?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기본 요소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개혁

은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바, 조건과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1) 개혁·개방의 조건

코르나이(Janos Kornai)의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개념화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 체계에서 개혁이라고 칭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¹⁾ 첫째 요건은 ① 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 구조, ② 국가 소유권, ③ 관료적 조정 메커니즘 등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에 변화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²⁾ 둘째 요건은 이상의 변화가 사회주의 체제를 변혁시킬 만큼 과격하지는 않으면서 약간 급격한 혹은 완만한(moderately radical or moderate)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혁이란 심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문에까지 미치며 완급의 정도에 있어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 만큼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페이스로 진행되는 변화이다.

심도(depth)와 관련된 첫째 요건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를 특징짓는 기본 요소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먼저 공식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누적된 비효율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목표의 설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공산당 중심의

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61, 388.

2) 심도를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①, ②, ③이다. 이 외에도 ④ 실적주의, 간부의 가부장적 행위, ⑤ 전형적인 경제 현상으로서 강요된 성장, 노동 부족, 실업 현상 등이 있다. 물론 심도의 순위가 높은 것은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 구조에서의 변화는 특히 당·정 간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경제 관련 정권 기관의 자율성 증대에 따른 권력 기관간의 권위 관계의 변화이다. ② 국가 소유권의 변화는 생산 수단의 국가적 및 사회적 소유의 개념에서 탈피함으로써 국영 기업과 협동 농장 체계로부터 사적 소유와 경영의 허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③ 관료적 통제 메커니즘의 이완은 곧 국가계획에 의한 상명하달식의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 하위 생산 단위의 계획 및 생산 공정 과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역적 독자성에 따른 경제 관리를 의미한다. 한편 급진성(radicalism)과 관련한 둘째 요건은 사회주의 정치 및 경제 체계의 기본 골간인 공산당에 의한 지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척되어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혁과 개방은 상호 작용함으로써 효과성과 안정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흔히 개혁과 개방을 두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한다. 개혁 자체가 효율과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인 까닭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주저할 필요가 없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통한 자본축적을 노리게 된다. 반대로 이 같은 개방으로 인해 개혁은 가속도를 얻게 되며 심도가 깊어지게 된다. 물론 개방에 따른 해외 사조의 유입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경계의 눈초리는 지속되지만, 개방을 거부한 채 개혁을 지속시켜 나가는 어렵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과 개방은 상호 인과적 관계(mutually causal relationship)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혁과 개방의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국가 규모에 따른 자본축적의 원천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밟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일부 경제 특구를 개방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개혁 조건을 내세우는 국제 금융 기구의 지원을 절제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개방의 방식과 속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베트남은 일정 지역의 수출 가공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함께 국제 금융 기구의 자본을 수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엄격한 개혁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원래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용도와 조건이 명시된, 말하자면 ‘꼬리표’ 달린 지원을 수용함에 따라 일정 부분 강요된 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베트남처럼 자본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 개혁 과정은 개방에 의해 가속화되며 개혁·개방의 상관 관계는 높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중국처럼 규모의 경제를 가져 자체의 자본축적이 가능한 경우 개혁은 자체적으로 입안되고 추진되며 개방은 개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2) 개혁·개방의 내용

개혁·개방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먼저 개혁은 크게 가격 자유화, 재정과 금융의 분리, 국영 기업 개혁 등 세 가지를 포함하게 된다.

첫째, 가격 자유화는 개혁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거시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자와 물가 급등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가격 자유화는 농업 생산물의 가격 자유화부터 환율의 실세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것이다. 이것은 농업 및 공업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가격 관리제로부터 탈피해 협의 가격제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농산물과 공산물 가격에 시장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개별 기업이 실질적인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물론 여기에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 국가가 지정하는 일부 안보 자원과 생산물을 가격 통제 품목으로 정한다. 이 외에 각 산업의 생산 요소 구입과 생산물 판매 가격은 대부분 시장가격화 된다.

둘째, 재정과 금융의 분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속성, 즉 재정에 대한 금융의 종속적 성격에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출 면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영 기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금융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분권적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금융이 재정에 종속되는 까닭은 중앙 은행이 예금과 대출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반면 국가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영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의무만 지니기 때문이다. 개혁 과정에서 금융 부문은 이분화되어 거시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은행과 다수의 상업 은행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 부문은 국가 보조금을 없애는 반면 소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제도를 신설하여 세입 확대를 노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적자를 금융 부문에서 화폐 팽창으로 보존하고 인플레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³⁾

셋째, 국영 기업 개혁은 비효율과 손실만 초래하는 산업과 공장·기업소를 퇴출시키고, 생산성이 높은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혁 정책 이전에는 국영 기업이 이윤, 감가상각비, 자본 사용료 등을 대부분 국가 재정에 귀속시키므로 재정 공급원이 되는 한편, 국가 재정을 공급받아 투자를 하므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국영 기업이 국가 목표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요 재정 공급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 T. M. Rycbczynski, "The Sequencing of Reform",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7, No. 4(1991).

에는 재정적자를 누증시키는 요인이 된다. 개혁을 추진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이 같은 비효율과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 자유화 및 재정·금융 개혁과 함께 국영 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국영 기업 개혁의 급진주의적 방식은 민영화로서,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 동구 국가에서는 이것을 택하였다.⁴⁾ 한편 점진주의적 방식은 국영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베트남과 중국에서 취해졌다.⁵⁾ 당국은 재정 부담이 되는 국영 기업 보조금을 중단하고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며, 국영 기업에 대한 직접 간섭과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서 만성적 적자를 낳는 국영 기업들을 정리해 나간다. 더 나아가서 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국영기업의 주식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개혁 조치들은 국제 금융 기구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 특별히 강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개혁의 내용이 자본 축적을 위해 추진된 개방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강요된 개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가 개혁 정책을 취한다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상의 세 가지 내용을 일정한 방식으로 포함하게 된다.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지닌 국가가 개방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로 해외 자본, 특히 달러와 기술을 유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 및 경공업·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 설비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또한 사회주의권 블록에 한정되었던 무역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역내 경제 블록에 가입함으로써 시장 확보를 노리게 된다. 따라서 대외 개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목표를 지향한다.

4) O. Blanchard, R. Dornbusch, P. Krugman, R. Layard and L. Summers, *Reform in Eastern Europe*(Cambridge, MA : MIT Press, 1991), pp. 8~16.

5) 권율, “베트남 국영기업의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2000. 11) 참조.

첫째는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로서 외국인에 의한 단독, 합작, 합영 등 다양한 방법의 민간 투자이다. 외국인 민간 투자 유치에 경험이 없던 사회주의 체제들은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경제 특구를 지정하여 민간 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인다. FDI는 그 방식에 관계없이 민간 자본인 만큼 비교적 해당 국가들 사이의 국제정치적 관계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하지만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바, 이들 사이의 외교 관계 부재로 투자보장협정, 이종과 세방지협정 등 경제 관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자본이 리스트를 부담한 채 투입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제금융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 ADB) 등 국제 금융 기구들로부터의 금융 지원이다. 이 지원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제 금융 기구를 주도하는 미국이 자신의 국제정치적 전략과 합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대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과 함께 적대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⁶⁾ 과거 미국은 배

6) 적대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미국인의 적대국과의 거래 관계 금지와 미국 제품의 교역 금지로서, 이것은 재무부와 상무부가 관여한 무역 경제 제재로서 '대적성국교역법'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미국 내 거주인과 조직, 전 세계적 미국 조직의 지점과 하부 조직 등은 거의 예외 없이 적대국과 상거래는 물론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는 미국 시민 또는 조직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적대국과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책이다. 무역 경제 제재는 미국인 및 조직의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에 대한 경제 제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 부품이 10% 이상 사용된 최종제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가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상품 생산과 마케팅에 있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미국이 국제 금융 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히 ODA 공여에 대한 비토권을 통한 경제 제재이다. 미국은 세계은행, IMF, ADB 등을 이끌면서 적대국에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바, 그 영향력은 무역 경제 제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 금융 기구의 공적 자금은 주로 대내 경제의 구조적 개혁과 사회 간접 자본 구축에 사용되는데, 미국의 비토권 행사는 적

트남과는 캄보디아 문제와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IMF, 세계은행 등의 금융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북한과는 핵 및 미사일 개발이라는 현안 때문에 이들 금융 기구에 대한 가입과 지원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들 국제 금융 기구들의 지원에는 반드시 용도와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IMF는 재정, 금융, 외환 정책의 정상화 또는 합리화를 조건으로 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또한 간혹 민간 주도의 상업 차관 도입을 제한하기도 하는바, 이는 과도한 자금 조달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저리 또는 무이자 장기 융자 형태로 주로 발전소, 도로, 항만, 농업 관개 시스템, 상수도 등 사회 간접 자본 프로젝트와 교육, 보건·의료, 금융 제도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즉, IMF의 지원이 주로 해당국의 금융 정책 현대화와 구조 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인 반면, 세계은행의 금융 지원은 사회 간접 자본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됨으로써 경제개발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 산업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는 국제 금융 기구,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 기구들로부터의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이다. ODA는 성격상 사회 간접 자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목표를 가진 지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국가로 보면 최근 일본이 ODA 공여국으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점이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일본의 ODA는 '얼굴이 보일 수 있는 원조'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민간 기업의 참여적 개발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대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이 민간 기업이나 소규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국제 금융 기구에서 미국 비토권은 가히 위력을 지니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역내 경제 블록에의 편입과 세계시장의 진입이다.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국가는 이를 통해 주요 서방권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저임금의 노동 집약적 산업 상품의 수출을 통해 자본 및 기술 축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에 진력해야 하며, 관세 인하,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 장벽 완화 등 많은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미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과 각각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또는 정상 무역 관계(normal trade relation)를 맺었다.⁷⁾ 이제는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마지막 도전이자 목표인 셈이다.

개혁·개방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경제 체제의 내용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아직까지 북한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상과 같은 개념하에서 북한 특히 김정일의 경제 인식을 분석하는 기준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기준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북한이 어떤 부문에서 어느 정도 개혁 또는 개방의 가능성이 있으며, 심도와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개혁·개방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일의 담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본 논문의 다음 절들에서

7) 양자간의 차이는 미국측으로부터 잭슨·베닉 조항이라 불리는 무역법(Trade Act) 402 조의 적용 면제를 해마다 갱신해야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잭슨·베닉 조항은 최혜국 지위가 없는 비시장 경제 국가가 자국 국민의 자유로운 무제한적 해외 이민을 허용한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히 최혜국 지위를 받도록 허용해 주는 규정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은 어떤 국가에 대한 잭슨·베닉 조항의 적용 면제를 갱신하려면 매년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6월 3일까지 갱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 면제와 관련하여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은 2000년에 미국으로부터 이 조항의 완전한 적용 면제를 받아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유지한 반면, 베트남은 아직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매년 적용 면제를 갱신해야 하는 실정이다.

밝히고자 하는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정일의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은 어떠한가? 생산 양식 발전 단계와 사회주의 단계의 성격은 어떠하며, 이 단계의 정책적 과제인 사회주의 경제 관리 방식의 기본은 무엇인가?
- 김정일은 개혁·개방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공식 이데올로기 또는 권력 구조, 소유권 구조, 관료적 통제 등에서의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인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서 개혁의 일반 내용인 가격 자유화, 재정·금융의 분리, 국영 기업의 개혁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 김정일이 인식하는 대외 경제 관계 개선과 사회주의 경제 관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서 개혁과 개방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함축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일은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심도와 속도의 개혁과 개방 정책을 택할 것인가?

3. 김정일의 사회주의 경제 이론

개혁 가능성과 관련된 김정일의 인식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그의 전반적인 경제 이론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그의 담화를 중심으로 특히 개혁의 일반적 요건과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산 양식 발전 단계

김정일의 생산 양식 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은 김일성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회주의라는 과도기에 대한 해석은 물론 과도기 기간 동안에 취할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다만 김정일은 노동계급이라는 용어와 함께 인민 대중이란 용어를 강조해 사용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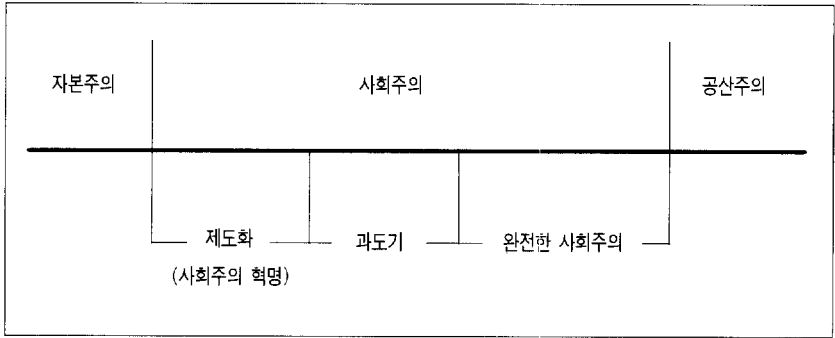
김일성과 김정일의 역사 발전 단계, 특히 생산 양식 발전 단계에 대한 해석은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먼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반혁명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새로운 소유권 구조가 확립되는 단계로서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전이 단계(transitional phase)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국가가 사회의 계급적 분열을 없애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착취의 기초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이 성취되면 국가의 존재가 불필요하게 되어 사라지게 된다는 이른바 ‘국가 소멸론’을 제기하였다.⁸⁾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산당에 의한 권력의 행사라는 것으로 구체화했으며, 노동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를 주장하면서 이 단계에서 고도의 생산성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마르크스가 의미하는 공산주의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명명하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칭하였으며, 레닌처럼 사회주의 단계에서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서 물질 기반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단계를 세분하였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레

8) Friedrich Engels, “Socialism : Utopian and Scientific” in Robert C. Tucker(ed.), *Marx-Engels Reader*, 2nd ed.(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72), p. 713.

〈표〉 김일성·김정일의 생산 양식 발전 단계



민주주의와 구별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붕괴 및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정립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사이에 과도기를 설정하였다.⁹⁾ 그에 의하면, 과도기에서는 착취에 의한 계급 관계가 끝나고 사회주의 제도가 건설되지만 계급간의 차이, 특히 농민과 노동자 사이의 차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계속하여 이러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적 착취가 중단된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형성된 후에도 역사 발전을 위해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일성이 상정하는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잔재가 점차 사라지는 시기로서 계속적인 혁명이 필요하다.¹⁰⁾

9)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사상사업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참조.

10) 1986년 김일성은 완전한 사회주의(또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 대해서 별도로 서술한 바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계선(界線)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75쪽.

김정일은 이상과 같은 김일성의 관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는 다만 김일성이 이론적으로 논의한 역사 발전 모델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치중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지나긴 과도기라고 간주하고, 이 시기의 문제점인 다양한 차이들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에 주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사상, 기술, 문화 등 3대 혁명을 통한 계속 혁명을 정당화하였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면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종국적으로 청산되지만 사회 성원들 사이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에서의 차이는 남아 있게 된다. 사회주의에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남아 있게 되는 근원은 낡은 사상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러한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이로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 성격을 띠게 된다. ……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11)

김정일은 북한의 상황을 과도기로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 간의 물질 및 문화 수준의 차이와 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과도기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리고 혁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일성의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 즉 자신의 세대로의 ‘대를 이어 혁명’이라는 논리도 발전시켰다. 3대 혁명에 대한 표현은 1998년 개정된 헌법(제9조)에서도

11)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마르크스 탄생 165주년 및 서거 10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91~92쪽.

나타난다.

2) 인민 대중과 국가의 역할

김정일의 생산 양식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에서 눈여겨볼 것은 인민 대중과 국가의 역할, 사회주의 경제의 과도기적 성격이다. 인민 대중과 국가의 역할은 역사 및 경제 주체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성격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이중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인민 대중과 국가에 관한 김정일의 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뿐만 아니라 구 사회주의 체제들의 계급 및 국가 이론과 크게 구별된다. 이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이고 사회주의 경제의 주체이다.¹²⁾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인민 대중은 다소 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민 대중은 계급적 개념이 아니며, 노동계급과 동일한 개념은 더욱이 아니다. 인민 대중은 다양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사회주의 체제 전 구성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여러 사회계급과 계층이 포함되고, 청년과 모든 외곽 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던 복잡 계층까지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역사와 경제 주체로서 노동계급이 아닌 인민 대중을 언급하는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노동계급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1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김일성 70회 생일 기념 전국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21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22쪽.

끝났다는 말인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 단계에서 해소시켜야 할 다양한 형태의 차이들이 사라졌다는 뜻인가?

김정일은 “노동계급의 당이 인민 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형태로 양자간의 관계를 밝힌 적이 있다.¹³⁾ 이는 북한 정치사가 다양한 사회계급 및 계층 또는 특별히 인텔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한 계급적 전환을 추구해 온 역사였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위에서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김정일의 인민 대중에 대한 언급은 구소련 후루시초프 집권기에 있었던 ‘전 인민의 국가(All-People’s State)’에 관한 논쟁을 상기시킨다. 1961년 소련의 부텐코(A. P. Butenko)를 중심으로 하는 이데올로 그들은 당시 소련 사회에는 더 이상 착취계급이 없으므로 모든 계급이 국가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전 인민의 국가’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전 인민의 국가’는 계급적 잔재를 없앤다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착취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에서는 노동계급이 지배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계급적 욕망을 가진 계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구체적으로 ‘전 인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로 인민 전체를 포함할 만큼 사회주의 사회의 기반이 확대되고, 둘째로 국가 역할이 변화되어 공산주의를 창조하고 국가 행정이 공공 조직으로 전이되며, 셋째로 민주적 지배 방식이 확대된다.¹⁴⁾

1960년대 말 소련에서 ‘전 인민의 국가’는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서

13)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돌 기념 논문, 1992년 10월 10일), 『중앙방송』, 1992년 11월 2일.

14) Roger E. Kaner, “The Rise and Fall of the ‘All-People’s State’: Recent Changes in the Soviet Theory of the State”, Lenard J. Cohen and Jane P. Shapiro(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Garden City, New York : Anchor Books, 1974), pp. 147~149.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연장선이라는 재해석이 내려지기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공산주의 건설이 요구되면서 공공 조직이 국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이 더욱 절실해지는데, 공공 조직들은 광범위한 조직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리더십과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결국 소련에서 ‘전 인민의 국가’ 논쟁은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 사회주의에서 계급적 착취가 종식되었다는 점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일치하지만, ‘전 인민의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없다.

김정일의 인민 대중 개념은 소련의 ‘전 인민의 국가’ 논쟁의 초기 주장과 후기 재해석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거나 양대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 인민의 국가’ 논쟁의 초기 주장처럼, 김정일은 사회주의에서 계급적 착취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계급(특히 노동계급)에 의한 계급적 지배를 부정한다. 반면, 초기 주장과는 달리, 김정일은 모든 계급과 계층이 국가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노동계급이 인민 대중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는 ‘전 인민의 국가’ 논쟁의 후기 재해석처럼 이른바 당의 외곽 단체라고 불리는 공공 조직들이 당적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⁶⁾

다시 말해, 김정일의 인민 대중 개념은 김일성이 1967년 제기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유보한 채, 포괄적인

15) *Ibid.*, pp. 156~157.

16)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455쪽.

대체 용어로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 혁명 즉 사회주의 제도의 창설자가 아닌 김정일이 자신의 정당성 확보와 대중적 지지 획득을 위한 상징적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성격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과도기인 만큼 이중성을 띠게 된다고 인식한다. 사회주의는 계급적 착취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질 만큼 높은 생산성을 성취하지 못한 단계이다. ‘필요에 따른 분배’와 인민의 복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계층간 차이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자본주의적 의식이 만연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바로 과도기의 이중성 문제가 난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김정일은 과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조건에서 물질적 자극의 옳은 결합’이라는 주장을 펴게 된다.¹⁷⁾

김정일이 사회주의 단계에서 향후 ‘필요에 따른 분배’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경공업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소비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1980년대에 들어 이른바 경공업 혁명과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을 통해 이 같

17) 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창립 45돌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김정일선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345쪽; “사회주의에 대한 궤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년 3월 1일 『근로자』 발표), 『중앙방송』, 1993년 3월 4일.

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그가 경공업 혁명을 말했다고 해서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본질적 변화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에 대해 강조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소비재 부족 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가 장기화되면서 인민들의 의식과 요구가 변화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해진다.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 제도가 좋다고 교양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¹⁸⁾라고 말하면서 물질적 만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을 인정하였다. 그가 인민의 복지를 논하면서 사상 의식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듯한 발언을 한 이유는 사회주의의 우수성, 특히 남북한 분단 상황하에서 남한 자본주의와 비교해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인민들에게 주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¹⁹⁾ 이는 그가 북한 인민 생활이 향상되면 남한 국민이 북한을 동경하게 되어 남한 내 혁명 역량이 강화된다거나, 해방 후 토지 개혁의 수혜계급이 한국전쟁 동안 희생적으로 싸웠다고 말한 데에서 드러난다.

둘째는 경제 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이다. 김정일은 가치 법칙과 관련한 원가, 가격, 이윤, 수익성 등의 개념을 경제 관리를 위해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⁰⁾ 물론 김정일이 말하는 합리화란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가치 법칙의 기본을 가격의 일원화 원칙, 다시 말해 국정 가격 원리로 보고 있다.

18)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김정일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쪽.

19) 최은희·신상우, 『김정일왕국』, 하권(서울: 동아일보사, 1988), 241쪽.

20) 김정일,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9월 13일), 『김정일선집』, 제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78~180쪽.

국가의 획일적 지도하에서 생산물 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가격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김정일의 합리화 개념은 노동의 동기 유인을 통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강조하는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김정일은 합리적인 노동 조직 및 노동 지불 방법으로서 특히 도급제를 강조한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제를 널리 실시하여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 평가를 정확히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의와 책임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겠습니까.²¹⁾

도급 지불제는 가장 합리적인 로동 보수 지불 형태입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도급 지불제를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정액 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위들에서도 될수록 작업량 과제를 정하여 주고 그 수행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주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²²⁾

도급제는 육체 노동 부문에서 정액 임금제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노동 강도의 약화를 우려한데에서 비롯되었다. 이 개념은 1940년 말부터 김일성이 사용한 용어로서²³⁾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
- 21)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 선집』, 제8권, 351쪽.
 - 22)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36쪽.
 - 23) 김일성, “새 환경과 새 조건은 새로운 사업태도를 요구한다”(산업부문경제 및 직맹 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49년 11월 19일), 『김일성저작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동일 직종 육체 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 정액 임금제를 부정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²⁴⁾ 이와 비슷한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의 협동 농장에서는 분조 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는 사회주의 기본원리인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의 동기 유인을 가족주의에서 찾으려는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있어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선 원리에 입각해 이른바 ‘물질 지상주의’, ‘경제 만능주의’,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과도기적 문제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표명한다.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선성에 관한 김정일의 논지는 이미 오래 전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대변혁 직후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지적하면서 이 같은 자신의 논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권의 와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기존 사회주의 체제들이 사회주의의 본질을 사회적 소유 관계에서만 찾는 반면 사상 교양을 게을리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²⁵⁾ 또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들이 유물론적 견해에 심취되어 경제 건설과 생산성을 강조함에 따라 사회주의 과도기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사상 사업을 외면하였다고 비판한다.²⁶⁾

24) 김정일은 육체 노동 부문에서의 도급제와 다르기는 하지만, 예술 작가들 사이에서도 정액 임금 대신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983년 10월 19일 노동당사 김정일 집무실 옆 집견실에서 최은희·신상옥과 나눈 대화에서, 작가들이 작품 수에 관계없이 임금을 부여받음에 따라 경쟁적인 노동의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것을 사회주의 제도의 모순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은희·신상옥, 『김정일왕국』, 하권, 142쪽.

25)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430~431쪽.

2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 “사상사업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중앙방송』, 1995년

‘물질 지상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비판은 김일성 사망 이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그가 황장엽 망명을 지칭해 자본주의에 대한 패배 의식의 발로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변절이라고 규정하는데에서 더욱 드러난다.

황장엽의 변절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큰 것이 아니지만 조선반도 정세의 침예성과 우리 혁명의 간고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격화되는 사회주의 원수들의 반공화국 책동에 혁명적 각성을 높이고 우리의 혁명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황장엽이 반동적 이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요구하는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²⁷⁾

김정일의 ‘물질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상 교양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문제를 북한의 관점에서 드러내는 것으로서, 북한 경제의 위기와 함께 이른바 남한의 ‘반동적 사조’ 때문에 더욱 첨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컨대,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성격을 단순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남북한 분단과 사회주의권 쇠퇴라는 현실적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기본 골격 안에서 경제 관리의 합리화와 물질적 인센티브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대변혁과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사상 교양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강조되고 물질적 보상은 부수적인 것

6월 21일 ;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27) 김정일, “혁명적 신념과 량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2월 17일, 3월 5일).

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3) 사회주의 경제 관리

김정일의 개혁적 인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대한 사고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만일 김정일의 계획 경제, 재정 및 금융, 소유의 주체 등에 관한 인식이 이미 2절에서 논의한 개혁의 일반적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북한의 개혁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경제의 계획과 수행, 재정·금융의 관계, 개인 및 공장·기업소의 소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김정일의 사회주의 경제 관리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김정일은 곳곳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명령 경제의 유지를 강조하는 논리이다. 비록 그가 연합 기업소를 중심으로 경영의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독립 채산제를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있지만,²⁸⁾ 독립 채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명령 경제 체계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각 기업소(연합 기업소도 마찬가지)의 채산정보다는 국가계획명령 달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독립 채산제는 국가 계획을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명령 경제의 틀 안에 놓인 한 부분일 뿐이다.²⁹⁾

28)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348~349쪽; 김정일,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76쪽.

29) 박형중·임강택, “경제”,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서울: 박영사, 1999), 213쪽.

둘째, 김정일은 재정·금융에 관한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금융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국가 재정에 종속되어 있다. 생산 주체인 공장과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한편, 국가는 이들로부터 이윤, 감가상각비, 자본 사용료 등을 국가 재정에 귀속시킨다. 금융은 국가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단순 관리하는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 경제 체계에서는 금융 업무를 관장하는 은행은 모두 국영이며 상업 은행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재정과 금융은 바로 이 같은 원리에 의해 주종 관계로 연관되어 있다. 김정일은 이른바 ‘재정의 유일 관리제’라는 원칙을 통해 생산 수단을 장악한 국가가 재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그가 각 생산 단위의 창발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들 단위의 이윤 극대화를 통한 국가 재정으로의 귀속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리에서 그러할 뿐이다.

셋째, 김정일은 이상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소유권 문제에 관해 다소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잘 드러난다. 소유 주체에 관해서 구헌법은 국가, 협동 단체,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헌법은 국가, 사회 협동 단체, 개인으로 규정(제20조, 제24조)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구헌법이 부업을 통한 수입만 개인 소유로 인정한데 반면 신헌법은 “합리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제24조)라고 규정함으로써 본업으로서의 개인 경리에 의한 소유를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사회주의 대변혁과 북한 경제난 이후의 경제적 현상을 공인하는 것이기는

30) 김정일,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65~166쪽.

하지만, 아직까지 개혁의 중요한 내용인 국영 기업과 공장 개혁을 통한 소유권 구조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김정일의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 대한 분석을 개혁·개방의 기본 조건과 내용에 비추어볼 때, 특히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김정일의 이른바 사회주의 과도기의 계속 혁명론으로 인해, 코르나이가 지적한 개혁 요건인 이데올로기적 또는 노동당 중심의 권력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지극히 제한되었다. 또한 국가 소유권과 당·국가 체제의 관료적 통제 메커니즘에서의 변화 여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주로 김일성·김정일의 부자간 권력 승계에 따른 정권 공고화를 위한 정치 우선의 논리에서 비롯된다.
- 개혁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가격 자유화, 재정·금융의 분리, 국영 기업의 개혁 등에 부합되는 김정일 경제 인식의 단편을 찾아보기 힘들다.
- 경제 침체에 따른 국정 가격제가 매우 훼손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개인 소유권의 유연성을 일정 정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정일 담화의 전반적 기저는 가격 제도에 관해 계획 경제와 명령 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 재정·금융의 분리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이와 연관된 국영 기업의 개혁 근거도 부재하다. 재정으로부터의 금융의 독립은 생산 주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이어져 시장 경제의 경쟁적 논리에 의해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정일의 담화에서 이 같은 근거를 찾기 힘들다. 다만 김정일이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는 단위인 연합 기업소를 최근 해체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제가 상승 국면에 접어드는 경우 기업경영의 상대적

독자성이 증대될 가능성은 있다.

4. 김정일의 자본주의 및 대외 개방 인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과 개방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정도가 높을수록 개혁·개방의 효과는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북한의 개방 가능성과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그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외 개방에 관한 김정일의 언급을 분석하기로 한다.

1) 현대 자본주의의 존속 논리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특히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구분되는 자본주의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이론가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김정일은 현대 자본주의의 존속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레닌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1917)에서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가 발달한 최후의 단계 또는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제국주의의 특징적 양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제국주의는 생산과 자본이 집중된 독점 단계이며, 둘째로 몇몇 은행 자본가가 산업 자본을 흡수하여 금융 과두제를 형성하고, 셋째로 생산품 수출과 함께 자본 수출 현상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거대 자본주의 세력들에 의해 세계 영토가 분할된다는 것이다. 레닌에 의하면,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는 단순히 원자재의 획득이나 시장 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치밀한 네트워크에 의한 자본 침투를 통해 빈국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강화하게 되고, 세계는 불공평한 발전(uneven development)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러한 빈국에 대한 지배 강화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³¹⁾

한편, 김정일은 혁명의 계승 완성을 위해서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논한다.

첫째로 미국을 비롯한 거대 자본주의의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체들을 통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 나라들의 호상 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자본주의 열강들이 상품 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그것은 파괴적인 무장 충돌과 전쟁으로 번져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도 자본주의 열강들의 격화된 모순과 대립의 폭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 열강들은 경제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결탁하게 되었습니다.³²⁾

김정일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자본가들이 세력권 쟁탈을

31) Henry M. Christman(ed.), *Essential Works of Lenin*(New York : Dover, 1966), pp. 177~270.

32)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172쪽.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전후 군수 산업의 팽창으로 막대한 부를 취득한 미국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자본주의 체제들과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레닌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서, 김정일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물고 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에 넘어가 파멸에 직면하였던 자본주의가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둘째로 전후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함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들은 신식민지적 방법에 의해 발전 도상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켰다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신식민지적 방법이란 자주권의 인정과 원조를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이를 미끼로 시장과 자재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에 의해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가져와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로 전후 자본주의 체제들에서는 사회계급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여 마르크스가 예견한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생산력, 즉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의해 육체 노동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기술 및 정신 노동자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그는 문화 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들이 인텔리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부르주아화됨으로써 고전적 의미에서의 혁명계급이 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인텔리 대렬이 급속히 늘어나면 근로자들 속에서 소부르조아 사상의 영향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혁명적 교양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본주의 체도하에서 많은 인텔리들이 부르조아 사상과 소부르조아 사상에 물젖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나섭니다.³³⁾

말하자면, 현대 자본주의는 국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노동계급의 소부르주아화로 계급 혁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자본의 국제화를 레닌이 말한 자본의 침투에 의한 발전 도상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레닌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그의 주장은 단적으로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³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핵심인 자본주의 붕괴론 또는 자본주의 체제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김정일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 외에도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여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그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제도적인 면에서 더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 ‘좌우경적인 편향’을 범한 결과 여러 가지 결함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결함이란 중국의 문화 혁명처럼 극좌적 운동과 구소련 및 동구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김정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스즈키 마사유키가 ‘북조선식 신사고’³⁵⁾라고 부를 만큼 새로운 것인 동시에,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투쟁 과정에서 전자에 의한 후자의 포위로 보는 김정일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33) 위의 글, 181쪽.

34) 위의 글, 180쪽.

35) 鐸木昌之, 『北朝鮮：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92), 214쪽.

2) 대외 경제 협력 인식

개혁 가능성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을 찾아보기 힘든 데 비해,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인식은 간간히 드러난다. 이것은 대외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분석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 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주의 나라들, 신흥 세력 나라들이 서로 경제 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³⁶⁾

물론 북한의 국제적 경제 협력에 관한 주장은 김일성이 이미 “우리는 나라들 사이의 경제 협조를 반대하거나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경제 협조와 국제 분업을 구실로 하여 다른 나라 경제의 자립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막으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의 경제를 자기에게 얽어매려는 대국주의적 경향이다”³⁷⁾라고 말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김일성의 발언은 북한이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자주 외교를 지향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아 양대 사회주의 국가들과 불공평한 경제 관계를 맺지 않는 범

3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50쪽.

37)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년 4월 14일), 『김일성저작집』, 제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10쪽.

위 내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정일은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기류를 파악하고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간주되는 개발 도상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김정일의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그가 1984년 최은희·신상옥과 나눈 비공개 담화에서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첫째, 관광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중국의 후야오방 공산당 총서기가 자신에게 관광 사업을 제안했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 사업이 실시되기만 한다면 대규모 투자 없이도 달러의 유입을 유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아무튼 이 발언의 시기는 1989년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 관광 사업을 논의하기 이전으로서, 관광 사업에 대한 준비와 분석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드디어 현실화되었다.

둘째, 국지적 개방에 대한 인식이다. 김정일은 중국에 비해 북한의 국토가 협소하고 군사 요새화의 밀도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무한정 개방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그는 개방 대상 지역으로 청진과 강원도(금강산)를 지적하는 한편, 개성은 해안의 '중심'이 아다고 하면서 개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토의 규모나 중심을 고려하는 그의 생각은 남한과의 분단 상황을 의식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지적 개방에 관한 김정일의 사고는 1991년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 경제 무역 지대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한 것, 그리고 2000년 8월 남한의 언론사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개성 지역을 공단과 관광 지역으로 개방한다는

38) 최은희·신상옥, 『김정일왕국』, 하권, 244~255쪽.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개방에 관한 한 김정일은 국지적 개방만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는 대내 경제 관리와의 연계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자본주의 문화의 침습을 방지하기 위해 자립적 민족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김정일 자신의 주장, 특수 경제 지대에서의 기업 창설·운동을 장려하는 1998년 개정 헌법(제37조), 외국 자본을 아편에 비유한 『로동신문』 보도 등에서 잘 드러난다.³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및 대외 개방에 관한 김정일의 인식에서는 개방과 관련해 몇 가지 긍정적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한편 이것이 개혁과 연관성을 갖기에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일은 대내 개혁 의지가 없는 까닭에 다양한 개방의 형태 중에서 일부 특정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남한 및 외국인 기업의 직접 투자 확대, 관광 산업 유치, 무역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김정일은 남한 및 외국인 직접 투자가 대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구 중심으로 개방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김정일이 현대 자본주의를 통찰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남한 자본주의의 침투를 우려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 김정일의 개방 인식은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의 자본 유입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제적 요인으로서, 국제 금융 기구들을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의 대내 개혁의 인식

39)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1998년 9월 17일.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여러 가지 개혁 조건을 내세우는 국제 금융 기구의 지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 김정일은 개혁과 개방 사이의 연계 효과를 무시하고 있거나, 이를 인식한다면 부정적 상관관계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구 중심의 국지적 개방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결론

김정일의 담화를 통해 본 경제 인식은 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개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대외 개방이 대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인바, 개혁과 개방 간의 상호 작용에 따른 연계 효과를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개방 방식이 될 것임을 나타낸다.

개혁의 잠재 가능성과 관련, 경제 침체에 따른 국정 가격제의 훼손으로 개인 소유권의 유연성이 일정 정도 부여되었지만, 김정일은 가격 제도에 관해 현 계획 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금융 제도에 있어서도 현 계획 경제의 골격을 유지할 것이다. 미미하나 개혁의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독립 재산제를 실시하는 단위인 연합 기업소가 최근 해체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점을 고려한다면, 김정일은 경제가 상승 국면에 들어가는 경우 기업 경영의 상대적 독자성을 증진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김정일에게 개혁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개방에 있

어서 특정한 유형과 자본 유입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경제 인식에서 드러나는 개방 유형은 주로 국지적 개방이며, 자본 유입 방식은 경화 수입을 추구하는 관광 산업,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 이후 민간 기업의 FDI와 국가 차원의 ODA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국제 금융 기구, 특히 IMF의 지원은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의 북한이 IMF 지원에 따른 급진적 재정 및 금융 개혁 요구를 수용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그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외 개방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특구 중심의 국지적 개방은 관광 산업 이외에도 공업 단지, 중계 무역을 위한 거점 구축을 노리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미 및 대일 관계 진전에 따라 FDI와 ODA의 유입과 이에 따른 기업 진출을 둘러싸고 남한 및 외국 기업들 사이에 상당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방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자본 수입의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면, 김정일의 북한은 개혁 프로그램을 동반하는 국제 금융 기구의 지원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김일성저작집』, 제1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7).
 _____,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_____,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2).
 『중앙방송』, 1992년 11월 2일, 1993년 3월 4일, 1995년 6월 21일.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1998년 9월 17일.

<2차 자료>

권율, “베트남 국영기업의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2000.
 11).
 박형중·임강택, “경제”,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서울 : 박영사,
 1999).
 최은희·신상옥, 『김정일왕국』, 하권(서울 : 동아일보사, 1988).
 Blanchard, O., R. Dornbusch, P. Krugman, R. Layard and L. Summers,
Reform in Eastern Europe(Cambridge, MA : MIT Press, 1991).
 Christman, H. M.(ed.), *Essential Works of Lenin*(New York : Dover, 1966).
 Engels, F., “Socialism : Utopian and Scientific”, in Robert C. Tucker(ed.),
Marx-Engels Reader, 2nd ed.(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72).
 Kanet, R. E., “The Rise and Fall of the ‘All-People’s State’ : Recent
 Changes in the Soviet Theory of the State”, Lenard J. Cohen and
 Jane P. Shapiro(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New York : Anchor Books, 1974).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Rybczynski, T. M., “The Sequencing of Reform”,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7, No. 4(1991).

鐸木昌之, 『北朝鮮：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92).

(Abstract)

Kim Jong Il's Perception of Economic Policy on Reform and Opening

Sung Chull Kim(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Political Sci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s perception of economic policy as it appears in his public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reform and opening of the country. The rationale of this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whil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Kim's perceptions on reform and opening. Those studies that deal with the North Korean economy yield a fallacy of simplified cause-and-effect description, according to which structural limitations constrained Kim's orientation to reform and opening. In order to avoid such fallacy, Kim's perception of reform and opening must be analyzed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variable for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economic transformation in the future. Second, while previous studies on Kim's publications have focused their attention on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ideological spectrum and party affairs, there has been little work on Kim's perception of economic affairs. This originates from the tradition of division of labor among North Korea observers : political scientists have kept their eyes on politically-related documents, whereas economists have emphasized structural aspects of the socialist econom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is missing variable, that is, Kim Jong Il's perception of economic policy.

This study of Kim's publications demonstrate that he is negatively inclined against reform but shows the possibility of taking the open-door policy as well. That is, he intends to adopt the open-door policy without taking the risk of the internal economy being affected by the opening.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n opening without reform cannot guarantee the linkage effect produced by close interactions between reform and opening.

Kim maintains his support for the socialist control system led by the party and the state, although he has demonstrated some flexibility in ownership, in particular,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distribution mechanism. However, this does not exclude the potential for gradual reform in the long run. He may allow relative independence in the management of incorporated factories, if he is confident that the deteriorating North Korean economy can be recovered.

Inasmuch as Kim is not inclined towards reform in general, he favors a certain type of opening and capital inducement. The typical form of opening that he refers to in his publications would be the free economic zones as having potential for tourism, light industry, and trad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im may lead a more adventurous opening policy that aims a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at is notable

is that he is not ready to accommodate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which demand usually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fiscal and monetary system. Consequently, it is difficult for him to expect any immediate and positive results to be derived from the open-door policy.

Key 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Kim Jong Il, Opening, Perception, Reform.